

김기춘 · 조윤선... 특검, 구속수사 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두룩한 증거인멸 정황... 조윤선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모른다" 발뺌하다 말 바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순실 게이트'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수차례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도 이날 두 사람을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김 전 비서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박 정부에서 벌여졌던 국정농단과 각종 부정행위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씨에 대해 "난관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변하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지난달 12월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버텼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김 전 비서실장에겐 쏟아진 증거인멸 의혹도 수두룩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달 26일 특검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이전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기록이 삭제됐고, 문서도 대부분 폐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조 장관의 한결같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최순실 국정특위' 7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집요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

17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요 당직자들이 무대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천, 김무성, 정병국, 유승민, 주호영 의원, 이종구 정책위장.

하게 추궁하자 결국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시점에 대해 "1월 초 문체부 예술국장이 '해당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해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김종덕 전 장관이 쓰다 넘겨받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 문체부 직원에게 서울 서계동 집무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를 교체하

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장관의 전임자인 김종덕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전달되고 본격 시행됐던 시기에 사용한 것이다.

조 장관의 지시로 컴퓨터를 문체부 직원들이 교체했으며,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구 중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장관 비서가 교체됐는데, 이 직원이 장관의 허락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권력을 바탕으로 교묘히 범망을 피해 '법규러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내각의 핵심 인사 조 장관도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거인멸이야 워낙 유명하지 않으나"며 "조 장관도 본인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는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뉴스

정동영, 감리 강화 건축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이 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는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안 내놔

정동영 의원은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토크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후 "후진국형 사고는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사고원인"이라고 역설했다. 현행 건축법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동영 의원은 "감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 또한 감리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후진국형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건설현장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엄연한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규제 완화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유엔 출입기자 "潘, 친족등용·부정부패·무능"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출입하는 이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의 매튜 러셀 리(Matthew Russell Lee) 기사는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유엔 내부의 대체적인 생각은 반 전 총장이 친족 등용 및 부정부패 뿐 아니라 무능함으로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리 기사는 이날 블라디미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예로 현재 시리아 특사로 있는 스테판 데 미스투리는 반기문의 사위인 스티브 체터지를 승진시켜 주변서 반 전 총장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리 기사는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그 아들 반주현씨 관련 의혹에 대해 "기소 있기 오래 전부터 데니스반(반주현)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며 "데니스반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유엔빌딩의 임대주"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의 두번째 남동생인 반기호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리 기사는 "반기호씨가 미안파에서 두 개의 다른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KD파워라는 회사였고 다른 하나는 보성파워텍"이라며 "여기서 문제는, 미안파 정부 홈페이지에 그가 미안파 유엔 대표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리 기사는 "오히려 유엔의 한국대표부가 반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며 "또 반 전 총장의 동생이 교전 지대인 중국의 시안 지역에서도 광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반주현씨가 반 전 총장의 명성을 이용해 카타르 투자청을 대상으로 건물을 팔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 전 총장과 카타르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반 전 총장이 카타르 정부가 지원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 전 총장이 대표 업적으로 삼는 파리기후협약에 대해서도 "반 전 총장이 없어도 체결됐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뉴스

김중회 의원 "쌀 우선지급금 재정산 환수 불가"

국회 김중회 의원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농림부 김현수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의당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재정산해 그 차액을 일방적으로 환수하려는데, 이는 쌀값 폭락에 멍든 농심을 더욱 더 괴롭게 만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즉각 철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쌀값 폭락에 대응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등 매입 시 농가에 우선지급금(45,000원/40kg)을 지급했으나, 최근 이를 확정단가로 재산정(44,140원/40kg)해 그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환수단계에서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김 의원은 "당초 우선지급금은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6년은 산지가

격이 워낙 낮아 쌀값안정 등을 위해 93% 수준(4만5000원/40kg)으로 결정했던 것인바,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수급 정책실패에서 크게 기인한 것인데도 그 피해를 농가에 이중으로 전가하는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당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우선지급금 정산차액은 환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책회의'에서 주장 "결손·변동직불금 상계 등 검토"

정부 등에서 결손처리 하거나 또는 향후 지급될 변동직불금 등에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과 쌀값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환수계획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